<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Mitsui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과 한국의 석유화학사업 공조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일본투자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Mitsui의 투자제안이 삼성과 현대가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국가적이나 국민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Mitsui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산단지 투자 및 융자조건은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삼성과 현대의 통합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면서 궁지로 몰아세워 한-일경협의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다른 생각도 든다.

첫째, Mitsui는 대산단지 통합법인에 5000억원을 출자해 지분 25%를 보유하고, 채권단이 5200억-5300억원을 출자전환해 26%를 획득하며, 삼성과 현대는 자산가치에 따라 49%를 분할 보유한다는 지분분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Mitsui가 5000억원을 출자하되 경영권은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면 경영권을 한국측이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배려한 것처럼 보이나, 재벌기업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반대의견을 약화시키고, 석유화학의 「석」자도 모르는 채권단 및 융자금 15억달러를 내세워 경영전권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성 · 현대의 지분을 49%로 못박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금 15억달러에 대해 산업은행, 아니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함은 물론 선순위 채권으로 설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5000억원을 출자해 사실상의 경영권은 장악하되 일체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을 여실히 내보인 것이다. 일본이 한일경협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이나 선순위 채권 인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Mitsui가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지급보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Mitsui는 투자제안에서 나프타 수입권 및 석유화학 수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프타 수입권과 합성수지 및 Aromatics 수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을 좌우한다고 볼 때 Mitsui 제안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Mitsui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입권을 보장할 경우 연간 커미션이 300억-600억원에 달해 「꿩먹고 알먹기」식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합법인의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하다. Mitsui 컨소시엄이 지분을 출자할 법인을 세우고, 무역법인을 별도로 보유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을 보면 꿍꿍이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넷째, Mitsui는 삼성 · 현대의 채무 5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후순위 채권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투자 및 융자분은 모두 챙기고 국내 금융권의 채권은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다섯째, Mitsui가 양사의 기업가치를 1조원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삼성 및 현대가 비수익 부실자산 1조2000억원 규모를 통합법인 출범전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가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여길 것이다. ADL의 평가가치 1조8000억원에 훨씬 미달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1조2000억원을 투자할 바에는 그대로 운영하지 왜 통합하고 매각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Mitsui측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화학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삼성과 현대가 석유화학 투자 과정에서 실제투자가 아닌 「부풀리기 투자」로 부채를 키워왔다는 관점에서 요구한 것이라면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Mitsui가 노리는 것은 채권 5100억원의 출자전환, 15억달러의 지급보증, 부실자산 1조2000억원 인수, 나프타 수입권 및 합성수지 수출권 확보 등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일경협의 생색은 내면서 삼성 · 현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어 만족한다는 심산으로 이해된다.

대산단지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석유화학 빅딜을 포기해야 하고, 대산단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9/9/6>